

박준수의 淸談直筆

최범직 펴냄



내년이면 5·18 40주년을 맞는다. 당시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시위를 주도한 대학생과 청년들은 이제 회갑을 넘긴 초로(初老)의 나이가 되었다. 동시대를 살아온 필자도 어느덧 주름진 얼굴의 중년이 된 지금 깊은 감회에 젖는다. 그리고 당시 금남로에서 생생히 목격한 비극적 참상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북쪽에 접어든 5·18을 회고하면서 우리 광주의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시민들이 민주화를 외치며 피를 흘렸던 이면에는 독재 권력에 의한 지역차별과 경제낙후에 대한 강한 불만이 내재해 있었다. 김대중이라는 정치적 추종 인물의 구원과 더불어 경부선을 축으로 하는 독재 개발체제에 대한 저항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로서 1987년 6월 민주항쟁 승리 이후 치러진 12월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서 '1도3김'의 후보들은 한결같이 지역간 균형발전을 내세우며 호남지역민의 표심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특히 신군부 출신 노태우

인공지능(AI)과 광주첨단단지의 교훈

후보는 '서남해안시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호남지역의 개발 공약을 집중 부각시켰다.

지역주의에 발목 잡힌 백년대계

그러한 정치적 과정을 통해 탄생한 국가프로젝트 가운데 하나가 광주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이하 광주첨단단지)이다. 대통령에 당선된 노태우는 '서남해안시대'의 공약 실천 방안으로 1988년 4월15일 광주시청 방문 때 광주첨단단지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2000년대를 눈앞에 두고 첨단산업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대덕연구단지가 완성단계에 이르러 새로운 연구단지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었다.

이에 따라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가 과학기술처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광주첨단단지 밑그림을 그렸다. 그 청사진의 골자는 1천만 평 광활한 부지에 교육, 연구, 산업, 주거기능을 동시에 갖춘 새로운 개념의 과학연구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제1 후보지로 광산구 임곡과 황룡강 일대, 제2 후보지로 비아-삼소동 지역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 부처 협의와 정권교체의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감질이 가해져 당초에 그렸던 청사진에서 크게 후퇴한 제2후보지 중

심의 광주첨단단지 계획안이 확정되었다. 이 당시 정치권은 '전국토 기술지대망'이란 교묘한 논리로 광주만의 첨단단지 건설에 경계심을 드러내며 발목을 잡았다. 게다가 단지조성 이후에도 정치권의 무관심과 IMF사태 등 경제상황 악화로 표류를 거듭하며 상당기간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었다.

당시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장 이었던 송인성 전남대 명예교수는 "만일 광주첨단단지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됐다면 미래지향적인 국가산업구조 개편에 핵심역할을 했을 것"이라며 "더욱 빨리 더욱 알차게 성과를 냈을 텐데 희석되는 바람에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몹시 아쉬워 했다.

AI 창업단지 시행착오 없어야

다행히도 광주첨단단지는 GIST(광주과학기술원)의 꾸준한 연구성과와 광산읍육성을 계기로 살아나기 시작해 오늘날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현재 광주첨단단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광주시는 GIST와 함께 첨단 3지구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4,061억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 창업 1천

개를 유치해 고용효과 2만7천500명, 인공지능 전문인력 5천150명 확보 등 미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GIST와 산학과제를 수행하는 등 R&D 투자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기업의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극복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창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AI 기반 혁신 창업생태계를 조성을 통하여 'AI+X(주력산업)' 융합과 스타트업 활성화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AI 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광주 AI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현안 과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AI 산업발전 속도에 맞게 조속히 AI산업단지 육성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일반법과 개별법 형태 2가지 법안이 상정돼 있는데 일반법으로 제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으므로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사업은 지역경제의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국가 균형발전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그런데 일부 정치권에서는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사업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예산배정과 사업추진에 만足を 걸고 있다. 이번 만큼은 정치권도 국익차원에서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본사부사장

社說

전남 '에듀택시' 전국 확산 환영한다

전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에듀택시'(Edu-Taxi)제도가 호평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4일부터 6일까지 제주에서 열리는 교육부 주최 '농어촌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지원 국가시책사업 시·도교육청 담당자협의회'에서 에듀택시 운영 현황을 소개한다. 이번 행사는 에듀택시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의 에듀택시 제도는 민선3기 장석웅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도입됐다. 교통이 취약한 읍·면 거주 초·중·고학생 가운데 집에서 학교까지 통학 거리가 2km가 넘고 버스 통학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학생을 상대로 통학용 택시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 제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9월 전남 21개 시·군으로 전면 확대돼 현재 136개교, 700여명의 학생이 혜택을 보고 있다.

원래 에듀택시는 이낙연 총리가 전남도지사 때 실시한 '100원 택시'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원 택시는 농어촌 노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만일 어르신이 마을회관에서 읍면 소재지로 이동

하면 택시기사에게 100원만 지불하면 된다. 그러면 지자체가 택시 이용 금액에서 100원을 뺀 잔액을 지불해주는 방식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 에듀택시 사업 추진과 관련한 자료를 보냈으며, 이후 경북도청 및 일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벤치마킹 문의와 자료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이번 제주 행사는 교육부가 에듀택시 제도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해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것인 후문이다. 도교육청은 여기서 에듀택시 사업 추진 전반과 전남의 통학지원 사업을 우수 사례로 발표하고, 사업 내용을 전국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들과 공유하며 통학 여건 등에 대해 컨설팅할 예정이다.

학교 통·폐합으로 농어촌 지역 통학 여건이 악화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에듀택시 제도는 이제 작은 학교 살리기는 물론 농어촌 교육 환경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도교육청의 모범 사례 발표가 전남지역뿐 아니라 전국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북구의회, 장학생 추천 신뢰성 확보해야

공정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할 장학생 선발의 추천권을 놓고 광주 북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깜짜미'를 하고 있다고 한다. 여타 의원들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장학생 추천과 관련한 어떤 논의나 정보 공유도 없었다는 얘기다.

북구의회 소재세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북구장학회 장학생 선발과 관련 북구의회 몫으로 일정 비율 추천권이 있지만, 의장단이 제외된 다른 의원들은 이 추천권이 있는지도 모른 상태"라며 "의장단끼리 짬짜미로 추천하고, 다른 의원들과 이를 일절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북구장학회는 지역사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2008년부터 장학생 선발을 시작했다. 선발 방식은 '신정장학생'과 '추천장학생(특기장학생·특별장학생)'으로 구분된다. 특별장학생은 장애인, 다문화, 자원봉사센터 및 북한이탈주민 등의 추천기관에서 소년·소년가장, 효행자, 장애인 등을 추천하게 된다. 2009년부터 북구의회에서는 매년 2명씩 특별장학생 추천을 해왔고, 올해는 북구장학회 이사

회에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특별장학생 비율을 기존 10%에서 15% 상향함으로써 의회 추천권 몫이 4명으로 늘었다.

북구의회는 특별장학생을 추천한 의원에 대한 문서상 기록과 회의록을 남기지 않아 발생이다. 그동안 의장단이 추천해왔던 관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일부 의원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추천하는 방식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한 의원은 "의회에서 특별장학생을 추천하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 의회 몫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렇잖아도 지방의원들이 지역민을 대변하기는커녕 갑질과 금품 등 각종 일탈행위로 물의를 빚으며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때다. 자칫 미달과 역량 부족이란 꼬리표를 떼지 못해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수인재 육성, 교육여건 개선'이란 목적으로 시작된 장학회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활용된다면 돈들의 주고받은 어떻게 피하겠는가. 북구의회는 공정하게 장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기고



강영숙
광주시 여성가족정책관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아동학대 문제를 떠올릴 때면 올해 초 상영된 영화 '가버나움'이 생각난다. '이 예쁜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라는 생각이 정말로 황당하고 숨이 막히는 분노가 일었음을 기억한다. 영화는 12살쯤 되는 주인공 자인이 부모를 고소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고소를 하는 이유는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니깐..."다. 본인을 태어나게 했지만 출생 신고조차 하지 않아 세상에 없는 존재로, 무책임한 부모때문에 주인공은 어린 나이에 보호받기는커녕 너무나도 험잡고 치열하게 살아간다.

"자라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어요!" 지극히 인간다운 삶과 인간의 존엄을 열망하는 주인공 어린소년의 외침이 선명하다. 부모는 바람직한 양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양육방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훈육이 어느정도 필요하다. 훈육은 '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가르쳐 기쁨'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훈육과 처벌을 구분짓지 못하고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처벌하는 것은 명백한 아동학대이며 범 죄이다. '내 자식 내가 키우는데 이런 정도 좀이야 관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멈춰야 한다.

사람의 때로 위장된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비난과 질책하는 말투, 위협적인 눈빛 모두 문제행동을 교정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어른의 의도와는 달리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낮은 자존감, 죄책감 등이 마음의 상처로 남아 성인이 된 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으로 남겨나 흉악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정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그 중 민법에 규정된 '부모 징계권' 조항에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스웨덴 등 전세계 56개국 아이들에 대한 처벌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958년 제정 이후 개정되지 못한 채 친권자의 징계권이 남용되고 있어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광주시는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념 행사를 개최하였고, 더불어 노란리본달기, 버스정류장 광고부착, 신고전화 112 알리기 등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행정이나 유관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여전히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특히, 가정내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주변인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학대를 받는 아이들은 온몸으로 신호를 보낸다고 한다. 소리없는 외침이 무관심속에 묻히고 스쳐지나가지 않도록 우리 시민 모두가 아동학대예방 감시단이 되어 아이들의 신호를 캐치해야 한다.

저출산 시대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이를 낳고양육 하라 하고 태어난 소중함, 아이들을 공

야 할 것이다. 미래의 주역이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주인공 아동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하고 나라도 튼튼해진다.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지 말고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소통해 보자. 관점이 변하면 방법이 생기고 올바른 양육문화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내 자녀를 잘 키우고자 한다. 필자가 선배 양육가로서 '한걸음 멈춤'을 제안해 본다. 아이와 문제상황이 생기면 고치려 고만 하지 말고 한걸음 멈추어 나의 태도와 행동을 돌아켜 보자. 아이의 행동에도 나름의 이유를 찾고 비로소 느끼게 된다. 맞아야 하는 것은 아이가 아니라 '가르치는 방법, 아이와 눈높이'라는 것을!

'아이날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 가정이나 사회 곳곳에서 올바른 양육문화를 배우고 실천되길 바란다. '맞아도 되는 아이는 없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아동학대의 80%가 가정내 발생하는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 훈육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인식개선 부모교육, 그리고 아동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사에 대한 신고의무자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사·의료인·경찰 등 신고의무자 신고의식 향상 (미신고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가 '가정 내 학대'의 심각성 공감대 확산되면서 신고 증가, 이렇듯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늘고 있음에 아동학대 사건이 보도되고 있다.

독자투고

겨울철 졸음운전 각별히 유의하자

겨울철에 가끔 자동차가 차선을 넘나들며 휘청거리듯 곡에 운전을 하는 아찔한 순간을 보는 경우가 있다. 이는 겨울철 차량을 타면 한기



로 인해 히터와 열선시트를 켜고 주행하는 경우가 많으면서 '드롭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드롭비'는 운전자(Driver)와 좀비(Zombie)의 합성어로 겨울철 자동차 히터를 가동하면 실내온도가 높아져 근육이 나른해 지고, 밀폐된 실내에서 숨을 쉬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실내 산소가 부족하여 졸음을 유발한다.

특히 늦은 시간의 심야운전, 휴식 없는 장거리 운전, 식사 후 식곤증 상태에서 운전, 피로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전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 실내를 충분히 환기해야 한다. 또 장시간 운전을 하게 되면 근육의 피로도가 높아지

게 자극을 주면 졸음을 쫓을 수 있다. 초콜릿, 껌과 같은 간식을 챙기거나 두통약은 졸음을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으니 복용 피하계 운전을 해야 한다면 약 처방 시 미리 설명하고, 졸음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약을 먹는 것도 한 방법이다. /윤시현·광주북부경찰서 두임지구대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공무원·군인연금 2028년 가입자 100명이 수급자 50명 부양"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8년에는 가입자 100명이 수급자를 50명 이상 부양할 것으로 전망된다. 8대 사회보험 전체 재정수지 흑자폭이 10년 뒤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8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의미한다. 예정치는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의 연평균 지출증가율이 7.8%로 6.1%인 수입증가율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수지(수입-지출) 흑자는 올해 35조5천억원에서 2028년 20조8천억원으로 41.4% 줄어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 건정성이 우려됐다. 이미 적자인 공무원연금 적자폭이 올해 2조2천억원에서 2028년 5조1천억원으로, 군인연금 적자폭도 1조6천억원에서 2조4천억원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가입자 100명이 부양하는 수급자의 수를 의미하는 '제도부양비'도 두 연금이 취약했다. 공무원연금의 제도부양비는 올해 43.5명에서 2028년 51.0명으로, 같은 기간 군인연금도 51.9명에서 54.6명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연금에 돈을 넣는 사람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연금에서 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특히 군인연금은 지출 대비 수입 비율이 가장 낮아 국가 지원 적자보전금을 올해 1조6천억원에서 2028년 2조4천억원까지 증가한다"며 "군인연금도 기여금부담률 인상, 연금지급 개시 연령 조정, 연금지급을 인하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南成淑 논설실장 鄭鎮坦 편집국장 吳星洙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기부 650-2030	채운부 650-2065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사진부 650-2080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논설실 650-2006	기획사입국 650-2079	입무국 650-2019
문화부 650-2067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가)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